

# 10년 후 한국경제의 자화상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10년 후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국내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 경제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앞날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어 이른바 '10년 후 걱정 증세'가 우리 사회에 형성되고 있는 느낌이다.

일단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 10년 동안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도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자조적인 조사 결과도 눈에 띄는 내용이다.

한국 경제의 장래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다. 미래 예측이 현재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일단 장기간에 걸쳐 경기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경기 순환상 최장기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성장 잠재력 약화로 지금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3~4%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 경제 사회의 '3불(不)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자신감과 활력도 상실되고 있다. 우선 예상보다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와 기술 혁신, 중국 경제의 급부상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 사회의 노령화와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북핵 문제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사회의 계층간·정파간·지역간 갈등 양상이 끝없이 전개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불신의 골이 한동안 메우기 힘들 정도로 깊어지고 있다. 3불 현상의 만연은 국내 경제 주체들을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들고 경제 응집력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알차게 발전시켜 현재의 비관론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을 복원시켜 비관론의 근원지인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국내 경제를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는 일이다. 5%대 성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달성하겠다고 하다가 4%도 괜찮고 3%대도 나쁜 성장은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는, 책임 회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력만 낮출 뿐이다.

경기 회복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도록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도권 발전 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정책은 기존의 업종별 대책에서 이제는 세계적 기업을 육성하는 기업 정책으로 정책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늘 되풀이되는 산업별 경쟁력 강화 대책들을 '분야별 세계 100대 기업 육성책' 등으로 바꾸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자신감과 역동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변화에 의한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정치 경제 사회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매년 경쟁력 지수 발표로 유명한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지난 90년대 이후 세계 경제 경쟁이 생산 공정 경쟁에서 사회 시스템 경쟁으로 전환됐다고 선언했다. 다시 말해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 공정의 효율성 증대로 비용을 낮추는 것보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쟁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의 확립, 시장 경제 시스템 구축,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등이 우리 사회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다. 특히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 비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이해와 협력 속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포용력과 실천력을 갖춘 공적 부문의 존재 여부는 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